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16년 11월 19일(토)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민중행동 | www.pssp.org/gj | pymjhd@gmail.com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80-27 2층 | www.pssp.org/ic | icpssp@jinbo.net

박근혜 퇴진, 백만 촛불만 할 수 있다!

정치놀음으로 국민을 흔들지 말라

불안하다

8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 언론은 백만 촛불의 물결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 그 사이 몇 개월이라도 흐른 듯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한 게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지난 토요일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들은 초라하게 흩날리고 짓밟혔다.

솔직해지자. 불안하다. 백만을 넘어 이백만이 모여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외쳐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꿈틀댄다.

그래서 다시 광장에 섰다. 이 불안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눈 맞추고 싶어서.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힘이 되는 서로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이토록 꿈쩍도 않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고 듣고 싶어서.

엑스트라가 될 순 없다

잠시 잊고 있었다. 박근혜가 얼마나 뻔뻔한 대통령이었는지를. 퇴진도 2선 후퇴도 없단다. 검찰 조사조차 당장 받을 수 없다며 버틴다. 버티기만 하면 다행이려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등 기존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퇴진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주 사이 정국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정보를 독점하고 선별해 언론에 흘리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입을 통해 휘두르는 칼날은 청와대부터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빈 박스와 창호지로 조롱당하던 과거는 지운 듯하다.

많은 이들을 광장에서 만나고 기뻐하며 또 잠시 잊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판을 깐 것은 조선일보였고,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공개였다. 이후 종편을 포함한 보수언론과 검찰은 국민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디서 분노해야 할지까지 지시하며, 이미 '용도 폐기'된 박근혜를 마음껏 흔들고 조롱하고 있다. 지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보조차 그렇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멋대로 이용해 정치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1년 전과 비교해 누가 제일 큰 변신을 했는지 돌아보면 분명해진다. 그들은 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 탄핵, 나아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인다. 그 시나리오 속에서 백만 촛불은 보수 재집권을 위한 새판 짜기에 배경처럼 깔리는 엑스트라가 될지 모른다. 토요일 저녁마다 평화롭게 촛불을 든다면 적당히 박수쳐주며 무시하면 되고, 합법의 틀을 넘은 시위를 벌인다면 고립시켜 공격하면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우리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요란한 포격 후 구도를 재편하여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자들의 재빠른 변신을 목격하고 있다. 몇 개의 시나리오를 들고 어둠 속에서 눈알을 굴리는 재벌과 보수 언론, 검찰,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 정국의 주도권이 이 광장에 나온 국민들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배나 채우면 그만이라 여겨 개 · 돼지라 무시하던 자들이 깨어나 자기 힘으로 세상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분노의 불길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의 국정농단을 넘어 이 사회 구석구석에 가득찬 억압과 굴종을 털어버리려는 노력으로 번지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떨쳐 일어난 국민들을 다시 엑스트라의 지위로 끌어내리려는 기득권층의 시도가 반복되었다. 4.19혁명의 민주의 외침은 1년 후 혼란을 핑계 삼아 권력을 손에 넣은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짓밟혔다. 87년 6월에는,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넘어서려는 분출하는 요구를 대통령 뽑는 투표용지 한 장으로 입막음했다. 2008년의 뜨거운 촛불집회는 명박산성 앞의 좌절로 끝을 맺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청산해야 할 때에 청산하지 못했던 모든 추악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87년만큼 모였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과제가 민주화보다도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 박근혜를 앞세워 기득권의 잇속을 차리던 '박근혜 체제'를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박근혜 퇴진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 체제는 매일매일 나를 옥죄어 비굴하게 입 닥치고 살게 만든 힘으로, 내 직장과 삶의 공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신념이다. 우리는 더 끈질기고, 더 치밀해져야 한다. 정치놀음에 빠지지 않고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유일한 힘은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

검찰의 이상한 행보, 정치 검찰 본색 드러내나

1992년 이탈리아 "깨끗한 손"의 교훈을 잊어선 안 돼

검찰이 오락가락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청와대와 거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비리 혐의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도, 계속적인 조사거부에 "당혹스럽다"며 뒤로 물러선다.

검찰이 누구 편인지 또한 알 수 없다. 언론에서는 검찰을 쥐고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누구 편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조선일보는 한동안 조선일보에 칼럼을 연재했던 최재경 수석이 취임하자 매우 호의적인 보도를 내보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최재경 수석이 사실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조선일보보다는 친박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검찰의 이상한 행보만큼이나 그의 태도도 모호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수사 중인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거 걸려들었다는 뉴스도 나온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정보기관의 입이라 평가받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여야 대선후보 다수가 연루되었음을 암시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총수들도 불러들여 고강도 수사를 했다. 역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죄로 엮어 넣을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검찰 세상이 도래한 듯 보인다. 청와대뿐 아니라 재벌총수, 여당, 야당까지 흔들 수 있는 정보를 검찰이 쥐고 있는 듯 보인다. 그간 수도 없이 정치개입을 해왔던 검찰이다 보니 이번에도 뭔가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차기 정권의 주인을 정할 수도 있다.

검찰과 조선일보의 움직임을 보면, 이탈리아의 "깨끗한 손"이 떠오른다. 1990년대 초 이탈리아 검찰은 '부패척결'을 외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인과 공무원 1천여 명을 구속했다. 이는 기존 정치권을 붕괴시키고 베를루스코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연합'을 탄생시켰다.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정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였다. 기존 정치권이 붕괴된 후 베를루스코니는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총리를 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검찰은 항상 권력의 향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왔던 '정치 검찰'이다.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

박근혜의 보수세력 갈라치기와 조중동의 딜레마

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성과퇴출제에서 조중동은 다시 박근혜 편에 섰다

청와대 태도가 돌변했다. 이번 주부터 검찰조사 시간끌기와 함께 국정을 재가동한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 중이고,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계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역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가 심각한 국정 혼란 속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가? 조선일보의 반응부터 보자.

시종일관 청와대와 친박을 물어뜯던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국정을 재가동시켜도 별 말이 없다.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 문제와 연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를 향해 국정에서 손을 떼라던 조선일보가 낯익은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열렬히 지지해 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보수세력을 재결집시키려면 필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딜레마다. 다른 보수신문들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긴 해야 하겠는데, 정작 박근혜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반대를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재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인다. 재벌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밝히면서도 강한 처벌보다는 피해자라고 두둔하고 나선다. 온갖 특종을 내보낸 JTBC도 유독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종이 없다.

사실 조선일보의 박근혜 비판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박근혜를 대체할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함이다. 청와대도 이를 알고 국정 재가동을 보수의 핵심 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묻자 조선일보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와 보수언론 · 검찰의 대립과 협력은 보수세력 내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이다. 헬조선, 더 심하게는 '개 · 돼지' 나라를 만들어 낼 정책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이로써 왜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다시 한 번 싸워야 할 대상, 외쳐야 할 구호가 무엇인지를 조선일보의 딜레마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해체시켜야 할 건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박근혜를 만든 체제 전체다. ●

5大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자

부익부빈익빈 · 재벌 · 공안통치 · 평화위협 · 입막음/굴종 체제가 박근혜를 만들었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건 비단 박근혜 개인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두 달을 돌아보자.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한 건 지난 9월 불거진 이대 입학비리 사건부터였다. 최순실이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이화여대에 압력을 행사해 입시 규정까지 바꿨던 일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것이다. 학내에서 부정입학과 특혜로 눈총을 받던 최순실의 딸은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며 오히려 동료들을 비난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을 아무 가식도 없이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 "이럴려고 공부했나?" 촛불집회 발언으로 화제가 된 어느 고등학생의 한탄처럼, 노력보단 부모 재산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건 인정하긴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분노한 건 부정할 수도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한국의 부익부빈익빈 구조다.

우리를 두 번째로 분노케 한 건 공권력의 파렴치함이었다. 지난달 경찰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해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을 강제부검하려 갖은 패악질을 해댔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살인진압 때문이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황당한 이유로 들며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우겼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영장을 청구해 시신을 탈취하려 했다.

저들은 무작정 우기고 공권력을 이용해 두드려 패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여긴다. 따져보면 정권 출범부터 그랬다. 대선 시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용의자를 갑자기 '감금당한 피해자'라고 우겼고,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축소를 지시했으며, 검찰은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 정권 4년 내내 검찰, 경찰, 국정원의 공안몰이와 정치개입이 끊이지 않았다.

게이트에 대한 사실이 점차 폭로되며 국정농단에 뒷돈을 대준 것이 재벌이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절망했다. 역대 정권의 비선실세 사건은 모두 정부 협조의 대가로 재벌에게 뒷돈을 받다 생긴 일들이었다. 삼성은 최순실에게 뒷돈을 대주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종잣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을 멋대로 썼고, CJ는 회장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최순실 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현대차는 노사관계를, 롯데는 경영권 분쟁을, 한화는 회장의 특별사면을 청탁했다.

우리 사회 갑 중의 갑이 재벌이다. 가계 부채가 1천조 원 넘어가는 동안 재벌은 자신의 곳간에 1천조 원을 쌓았다. 재벌은 경제에서만 갑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갑이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정치자금을 대줄 만큼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벌 대기업뿐이다. 정치인도, 언론도 재벌 앞에만 서면 끔뻑 죽는다. 우리는 5년 임기 대통령을 뽑지만 재벌 총수들은 임기 없이 영원히 경제의 군주로 군림한다. 재벌에게 대통령과 그들의 실세들이란 5년 간 이용할 임시직에 불과하다.

박근혜 하야가 대세인 와중에 정부는 며칠 전 북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협정을 멋대로 체결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박근혜가 협정을 서두르는 건 보수세력의 반북 정서를 자극해 다시 한 번 지지세력을 모아보자는 꼼수다.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정권은 "의북(依北) 정권"(북한에 의존하는 정권)이다. 박근혜는 임기 내내 보수세력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모든 실정을 덮고, 지지 세력을 모았다. 박근혜가 임기 초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며 집권 기반을 다진 계기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다. '종북좌파를 때려잡겠다'며 1년 넘게 마녀사냥을 했다. 집권 2년차에는 "통일대박"으로 표현된 대북정책으로, 집권 4년차에는 개성공단중단과 북한붕괴론으로 남북간 군사 긴장을 높였다. 최근에는 북한을 핑계로 사드까지 배치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했다. 그들이 그리는 세상에는 "북한 반대" 말고 뭐가 있는가? 박근혜처럼 반공 반북으로 모든 문제를 덮는다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퇴진할 만큼 잘못한 일은 없다",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 청와대와 친박 김진태 의원이 며칠 전 뱉은 말이다. 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을 화병으로 모두 죽이려나보다. 다시 확인하지만 박근혜와 그 세력은 애당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몇 달 전 교육부 고위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고 말한 건 실언이 아니라, 이 정권과 지배세력의 '신념'에 가깝다.

저들이 국민에게 입막고 굴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박근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박근혜를 만든 체제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부익부빈익빈 · 공안 · 재벌 · 평화위협 체제가 계속될 수 있는 건 국민을 입막고 굴종시켰기 때문이었다.

지난주, 우리는 이미 우리 앞을 막고 선 것이 박근혜-최순실뿐 아니라 박근혜를 세우고 그 뒤에서 잇속을 챙기고 있는 박근혜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그 체제의 핵심을 "5대 박근혜 체제"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 5대 체제의 해체가 없다면 광장에 나온 우리는 허전한 마음을 안고 구경꾼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 정도라도 전진한 건 평범한 이들의 저항과 노력 덕분이었다. 1960년 이승만을 하야시킨 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었다. 1987년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낸 건 6월의 시민항쟁이었고, 연이어 터진 7 · 8 · 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주류 언론의 폭로도, 유명 인사의 출연도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누가 대신해 이뤄줄 수 없다. 이제 우리 힘으로 박근혜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자! ●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우리 모두의 노후와 건강을 훔쳐간 범죄

〈지난 주 신문에서 삼성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헌정을 유린했는지 살펴봤다. 이번 호는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삼성이 어떻게 헌정을 넘어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살펴본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훔치고, 의료를 민영화시켰다

삼성은 최순실에게 선의로 돈을 주지 않았다. 삼성은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협조해 주기를 원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에 전화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게 국익입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됐다. 삼성은 2015년 초 최순실의 딸까지 챙기며 대통령에 다리를 놓아 달라 매달렸다. 그해 7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했고,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이재용의 그룹 내 지분을 높여주었다.

이재용을 위해 날린 국민 노후자금 = 240만 명 국민연금 월납부액. 손실액 더 커질 수 있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상식적이지 않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반대로 삼성물산 지분이 더 많은 국민연금에는 손해다. 당연히 합병반대 표를 던질 거라 예상했지만 국민연금은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경영승계 비용을 수조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 기쁜 마음에 말을 선물하는 건 약소할 정도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손해만 봤다. 합병여파로 주식가격이 하락해 6천억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백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따박따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이재용 경영승계하겠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갈취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한 것인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고 얼마 뒤 이재용부회장은 대통령과 독대했다. 그리고 합병 전에도 국민연금 투자위원장과 이재용부회장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 국민연금 갈취를 허락한 배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재용 시대'를 위한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

'이재용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에 의료민영화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다. 헬스케어는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00년대 초 e삼성의 실패를 만회하고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헬스케어 사업을 직접 챙겨왔다.

삼성이 사업을 한다는데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삼성이 하겠다는 헬스케어가 의료민영화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의 계획은 삼성의료원(병원), 삼성생명(보험), 삼성바이오로직스(제약)를 중심에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장악해서 전면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규제 완화, 제약 · 의료기기 자본의 영리추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표한 각종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은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삼성과 박근혜의 친밀한 관계가 이재용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줬다.

왜 수백만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잃어야 하나

최순실과 동업한 독일 승마협회 경영대표는 노조파괴를 묵인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의 무노조 방침은 악명 높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수없이 쓰러져도 노조가 없어 대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조노 방침은 삼성계열사를 넘어서 삼성과 거래하는 하청에도 관철된다. 삼성 갤럭시 부품을 만들던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약품을 쓰다가 시력을 잃었다.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국민노후자금을 갖다 바칠 만큼, 의료민영화와 의료비 폭등을 감당할 만큼,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포기할 만큼,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중요한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주었다. 삼성 이재용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놓아야 한다. 100만 촛불은 이제 삼성을 향해서도 촛불을 들 때가 됐다. ●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소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보수언론의 주요 기사, 논설을 매일 논평하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수언론의 속내를 파헤치고 박근혜 퇴진 항쟁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모색합시다!

www.pssp.org 사회진보연대 검색

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주소 [03984]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Tel 02-778-4001,4002 FAX 02-778-4006
후원계좌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섭)
www.pssp.org | pssp4001@gmail.com